

작성: 이윤식 연구위원 (lee.youn.seek@ydi.or.kr)

1. 총평: 무장해제, 국방붕괴, 동맹해체 노골화

- 문재인 정부의 국방정책은 남북관계 개선 우선이란 정치 논리에 입각해, ‘튼튼한 안보’를 위한 국방정책 본연의 목표와 원칙에서 탈선함으로써 국방력의 실질적 약화란 결과를 초래
 - ① △북한에 대한 ‘주적’ 개념 삭제, △「9·19 군사합의서」와 후속조치로 대적관 등 안보의식 약화 및 軍기강 해이로 직결, 국민들의 신뢰를 상실
 - 북한의 선의를 과신한 「9·19 군사합의서」는 우리의 안보역량을 일방적으로 무력화시킨 반면, 북한의 무력도발은 방관하는 허점을 노출
 - ② 남북 간 핵심 과제인 북핵 해결은 文정부의 방관자 스탠스(미북 간 어젠다로 방치)와 남북 협력에만 올인함으로써, 북한의 핵무장 조력으로 귀결
 - 북한의 핵능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, 이에 대응할 수 있는 핵심전력을 구축하는 노력은 매우 미흡
 - ③ 한미 간에는 북핵 억제력을 위한 전략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성급한 전작권 전환 추진 및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으로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
 - 브룩스 前 한미연합사령관은 2021년 7월 30일 “한미동맹 약화는 인기 영합적 민족주의를 만족시키려는 ‘국방의 정치화’ 때문”이라고 비판
 - ④ ‘先 병력감축 → 後 전력증강’의 부실한 국방개혁은 미래 국방전력의 약화는 물론, 접경지역의 軍 부대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초래해 실효성 없는 국방정책에 대한 불신을 조장
 - 「국방개혁 2.0」 추진에 따른 양구지역 경제적 손실은 연간 932억원 규모로 추산되며, 접경지역 지자체를 모두 합하면 손실액은 수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

- ⑤ △성폭력 피해 부사관에 대한 인권보호 외면, △육해상 접적 지역의 경계실패, △사드 정식배치 방치 등으로 느슨해진 국방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초래
- 이처럼 文정부의 지난 5년간 국방정책은 철저히 △군사방위태세 해체, △북한의 군사위협에 대한 대응력 포기, △對中 군사주권 포기, △한미 연합방위태세 약화, △군기강 해이 등 심각한 문제 이어짐
 - 이에 본 보고서는 상기 문제들 중에서도 특히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‘軍 기강 해이’에 대해 지적하고, 개선 방안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함

2. 평가: 국민의 신뢰 상실과 軍기강 해이

□ 잇단 성범죄로 군 인권보호 약화

- 文정부는 국방정책의 6대 기조 중 하나로 ‘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군 인권 보호 강화’를 제시
 - 6대 기조: ①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화, ②군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전작권 임기 내 전환, ③국방개혁 추진 및 국방의 문민화 달성, ④방위산업 육성, ⑤장병 근무여건 개선 및 군 인권 보호 강화, ⑥국가에 헌신한 유공자들에 대한 국민적 보상 등
- 그러나 상기 공약과 달리 문제인 정부 5년 간 군내 성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, 처벌은 여전히 부실
 - 文대통령은 임기 중 군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해 ‘원 스트라이크 아웃’ 퇴출 원칙을 적용해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, 오히려 군내 성범죄 증가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시민단체(군인권센터)가 주장
 - ※ 군인권센터에 따르면, △군내 성범죄·성폭력 관련 형사사건은 2017년 58건에서 2020년 73건으로, 또한 동 기간 징계사건은 76건에서 114건으로 증가했으나, △“군사법원 성범죄 1심 실형률은 10%로 민간의 25%에 비해 매우 낮은 상황이며 중징계가 아닌 ‘감봉’과 ‘정직’ 등 솜방망이 징계가 의심 된다”고 주장
 - 올 들어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에 대한 늑장대응과 부실수사로 국민적 공분을 받는 가운데 해군에서 성추행을 당한 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軍의 안일한 성범죄 대처 및 自淨능력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심화

- 2016년 「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」 시행으로 군 기본권과 인권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강화되었으나 軍 성범죄가 단절되지 않고 있음
 - 국방부 자료(2021.5월)에 따르면, 2017~2018년 증가하다가 2019년 다소 감소했으나, 2020년 다시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
 - 특히, 지난 6월 文대통령은 현충일 추념식 때, 공군 여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“국가가 지켜주지 못해 죄송하다”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고,
 - 장관 등 軍 지휘부를 청와대로 불러 “심기일전하라” 당부했음에도, 유사 사건이 재발했다는 건 軍 기강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했다는 증거

- 文정부 들어 군내 성범죄가 급증하고, 피해 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 것은 ①군 기강의 해이, ②인권의식의 부재 ③은폐와 허위 보고 폐습이 만연한 군 지휘 체계에 따른 것으로 보임
 - 이는 군의 전반적인 사기 저하는 물론 전력 손실, 그리고 對국민 신뢰추락이라는 부정적인 영향으로 귀결
 - ※ 일각에선 “軍 내부에 성추행이 중범죄란 인식이 없는 게 아니냐”며, “어떻게 성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, 동일 사건이 발생할 수 있냐”며 비판
 - 국민은 더이상 지휘부의 사과나 재발방지 약속을 믿을 수 없는 바, 軍의 신뢰회복을 위해서 국방장관 등 관련 책임자의 경질이 우선이란 지적이 제기

□ 국가에 헌신한 유공자에 대한 보상 소홀

- 文대통령은 제63회 현충일 추념식(2018.6.6.)에서 “보훈은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”이라고 밝히면서, “정부는 모든 애국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훈을 더 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”고 약속

- 그러나 이러한 공약과 달리 보훈정책 현장에서는 △국군포로 송환에 대한 정부 노력 전무, △천안함 생존자 등 <국가 유공자 예우>에 대한 논란, △보훈단체의 정치화 등에 대한 비판이 지속 제기
 - 文정부는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, 5차례의 고위급 회담, 그리고 2차례의 대북 특사 파견을 하면서도 국군포로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룬 적이 없음
 - ※ 국군 포로 문제를 총괄하는 ‘범정부 국군포로 대책위원회’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2020년 7월 단 한 차례 밖에 개최되지 않았음

- 천안함 생존 장병 34명 중에서 22명이 국가 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는데 등급기준 미달 사유로 현재까지 인정된 사람은 13명에 불과
 - ※ 국가보훈처는 2019년 10월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예비역 중사에 대해 '공상(公傷) 판정을 내려 논란이 일자, 재심의를 통해 전상(戰傷) 판정을 내렸음
 -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들로 구성된 보훈단체인 광복회 김원웅 회장이 '친일청산' 강조 발언 등으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시비가 지속
 - ※ 정치 편향적인 광복회장이 보훈단체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에 배치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론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보훈단체의 설립목적을 왜곡변질
 - 文대통령은 '서해수호의 날'에 2017년 취임 이후 3년 연속 기념식에 불참했다가, 2020년(5회) 총선을 앞두고 처음으로 참석해 논란
- 결국 文정부의 보훈정책은 많은 예산 투입 등 공약에도 불구하고, 실제 적용과정에서는 국민 분열과 갈등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통합을 위한 보훈의 원래 취지가 상당히 퇴색
- 일각에선 “文정부의 보훈정책이 이명박, 박근혜 정부의 국가수호 가치 중심의 보훈정책이라는 편향을 극복하고자 했으나 민족독립과 민주발전 가치에 경도되고 있으며 대북 정체성과 체제정체성을 훼손하는 역편향을 노정하였다”란 비판이 제기

3. 대안: 국민적 신뢰에 기반한 軍으로 재탄생

- 안보 현실 변화에 따른 對敵觀 정립 등 정신전력 확립
- 장병들에게 헌법적 가치에 기초한 우리 주도의 통일과 번영된 통일한국 미래 비전을 전파,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의 우월성을 인식하도록 교육
- 엄격한 훈련과 규율 확립, 강인한 정신전력을 구비한 필승의 '강한 군대'로 거듭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, 한반도 평화 통일을 이끌어 나가는데 우리 군이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
- 군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개선방안 마련
- 무엇보다 장병 인권존중과 명예로운 선진 병영문화 정착 유도

- 특히, 군내 인권 침해 사례 발생 시 민·관·군 합동 조사위원회 제도를 시행, 객관적이고 신속한 조사 및 사후조치를 통해 군의 對 국민 신뢰도를 제고
- 군내 맞춤형 성폭력 예방교육, 현장 중심의 예방시스템 구축, 피해자 보호·지원책 강화, 가해자 엄벌 등 다양한 대책 마련도 필수
 - 우선 성범죄 사건에서 불 때, ‘피해자 보호 시스템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바, 이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지휘관 평가 시에 반영
 - 성폭력 조사과정에서 피해자 신상이 유포되고, 상관이나 동료에 의한 합의 종용이 발생하는 등 피해자 보호 시스템이 적절히 작동되지 않는 걸 막을 수 있음
 - 다음, 성폭력 예방교육이 남성 중심의 군 문화로 인해 교육참여가 소극적이고, 사이버 교육의 경우 강사와 피교육자 간 상호 작용이 어려워 교육의 효과가 낮으므로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
 - 사이버 교육은 피교육자가 형식적으로 참여하게 되므로,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. 단순한 강의식이 아닌 역할연기,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

□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이 존경받는 보훈제도 정착

- 국군포로 송환 및 가족 예우지원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 모색. 동시에 현실적 기반 위에서 군 유해발굴 사업에 대한 지속적 확대
- 국가 유공자가족 및 유족 등에 대한 충분한 예우보상을 위한 공정한 선진보훈 체계의 조속한 구축
- 보훈단체 조직에 대한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
 - 정권코드에 맞춘 인사의 보훈단체장 임명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보훈단체의 명예실추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